

25.05.15.(목)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정책협약 체결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오늘(5/15) 16: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타워크레인 노동자 지지선언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자 중심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박홍배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고, 노동자 대표로는 최동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과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임금체불액 2조 448억 원 중 건설업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건설현장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은 골조공사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장비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나 노동자 권리보호는 미비한 실정이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발주자 직접 지급제’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는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체불임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바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약 3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안전 확보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도 중요의제로 다뤄졌다. 제조연도 조작, 불량부품 사용, 안전기준 미달 장비 확산 등은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제도적 규제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약식에 참석한 노동자 대표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위험과 착취 속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식 정책은 건설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생계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안전망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양대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현장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에 나설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새노종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정책

일 시 : 2025.5.15. (목) 16:1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

